

미혼남녀의 저출산 현상과 출산정책 효율성에 대한 인지수준 기초연구

장 진 경* (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부교수)

본 연구는 결혼연령기에 있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관,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지수준의 실태를 파악하고,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관에 따른 현 출산정책의 효율성과 미래 출산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인지수준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수집은 2004년 8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면서 합계출산율에 기여할 수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미혼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69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T-test, 그리고 F-test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20대초·중반, 직업은 학생, 종교는 기독교, 동거가족으로 부모님과 형제자매, 형제·자매수는 2명, 가정의 총소득은 300~400만원 미만, 개인수입 또는 용돈으로는 50~100만원미만이 가장 많았다. 2) 결혼관: 결혼에 대한 의무감은 대체로 높았고, 결혼에 대해서도 '하는 편이 좋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결혼계획여부에서도 미래 결혼을 하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결혼을 선택한 이유로는 인생의 동반자를 얻기 위해서, 독신을 선택한 이유로는 독신 생활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3) 출산 및 자녀관: 자녀출산의 책임감을 대체로 갖고 있으며, 자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고, 미래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녀가 필요한 이유로는 배우자와의 사랑의 산물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자녀출산에 대해 부부간의 의견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 심각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약간 심각하다는 의견이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났다. 4)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지수준: 저출산의 원인을 경제적 부담감 때문이며, 저출산 현상의 해결주체는 정부라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다. 저출산으로 인한 예측되는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로 생활환경의 개선과 생활비 및 자녀양육비 감소라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저출산으로 인한 예측되는 부정적인 변화(소비시장 위축, 가족해체현상 증가, 장래 노동력 부족, 전체인구감소, 복지비 지출확대/세금인상, 그리고 연금 및 의료보험의 불이익현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반면,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과반수에 가까운 응답자가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저출산의 가장 부정적인 예측으로 고령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5) 현 출산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인지수준: 결혼관에 따른 현 출산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인지차이 분석결과를 하위영역별로 보면, 먼저 결혼에 대한 의무감에 따른 현 출산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인지차이에서는 출산 축하금 지급, 불임치료 혹은 영구피임복원술에 건강보험적용, 그리고 보육수당지급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결혼에 대한 인식에 따른 현 출산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인지차이에서는 출산 축하금 지급, 아파트우선 분양 등 주거지원 강

화, 보육시설 확충 및 수혜아동 확대, 그리고 보육시설이용시간확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결혼의사에 따른 현 출산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인지차이에서는 출산 축하금 지급, 아파트우선 분양 등 주거지원 강화, 자녀교육비 지원 및 세제감면, 그리고 보육시설이용시간확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출산 및 자녀관에 따른 현 출산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인지차이 분석결과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현 출산정책 중 출산 축하금 지급, 불임치료 혹은 영구피임복원술에 건강보험적용, 그리고 보육수당지급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인지수준이 출산에 대한 의무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반면, 아파트우선 분양 등 주거지원 강화를 제외한 모든 정책에 대한 효율성의 인지수준은 자녀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출산의사가 있는 경우 이상자녀수에 따라서는 산전휴가 및 육아휴직확대, 보육시설 확충 및 수혜아동 확대, 보육수당지급, 그리고 보육시설이용시간 확대에 대한 효율성 인지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출산의사가 있는 경우 출산계획시기에 따라서도 산전휴가 및 육아휴직확대와 보육시설 확충 및 수혜아동 확대를 제외한 모든 정책에 대한 효율성 인지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6) 미래 출산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인지수준: 미혼남녀의 미래 출산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인지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관에 따른 효율성의 인지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결혼관에 따른 효율성의 인지수준을 비교한 결과를 하위영역별로 자세히 보면, 결혼에 대한 의무감에서 실업문제 해결, 결혼문화 만들기, 사회적 가치교육(가족, 결혼, 출산의 중요성 등), 그리고 사회의 양성평등문화정책의 정책안에 대한 효율성의 인지수준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결혼에 대한 인식에서는 실업문제 해결, 결혼문화 만들기, 사회적 가치교육, 공교육 정상화, 그리고 아동수당 도입의 정책안에 대한 효율성의 인지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결혼의사에 따른 효율성의 인지수준에서는 아동수당 도입의 정책안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출산정책안의 효율성에 대한 미혼남녀의 인지수준을 출산 및 자녀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출산에 대한 의무감에서는 실업문제 해결, 결혼문화 만들기, 사회적 가치교육, 사회의 양성평등문화 정착, 그리고 아동수당 도입 안에 대한 효율성의 인지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자녀관에 따른 미래 출산정책안에 대한 차이에서는 실업문제 해결, 결혼문화 만들기, 가족문화 만들기,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 안에 대한 효율성의 인지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출산의사가 있는 경우 출산 출산계획시기에 따른 효율성에 대한 인지수준에서는 실업문제 해결, 결혼문화 만들기, 사회적 가치교육, 그리고 사회의 양성평등문화 정착 안에 대해 차이를 나타냈다. 제언부분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